

정치 성향과 공리주의 성향, 뉴미디어 이용이 코로나19 방역 정책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방준호¹⁾ 박지원²⁾ 권오상²⁾ 김효정³⁾ 정동일²⁾ 설선희^{1*)}

¹⁾부산대학교 심리학과

²⁾울산과학기술원 바이오메디컬공학과

³⁾부산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지난 3년간 지속되었던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유행은 효과적인 정부 정책뿐만 아니라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동의와 협조 또한 중요하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주었다. 본 연구에서는 개인이 지닌 공리주의 성향과 정치 성향, 뉴미디어 이용 양상이 정부 정책에 대한 동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탐색하였다. 2022년 2월 17일부터 23일까지 온라인 설문을 통해, 성별과 연령, 지역을 고려한 인구비례 표본 1,232명을 대상으로 정치 성향과 공리주의 성향, 뉴미디어 이용 빈도를 측정하고 정부가 실제 시행 중이던 정책과의 일치 여부 및 정책이 지향하는 도덕적 입장(공리적 대 비공리적)을 달리한 코로나19 방역 정책에 대한 동의 정도를 측정하였다. 먼저, 정부 정책과 일치하는 방역 정책에 대해 정치 성향과 공리주의 성향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진보적일수록 설문 당시의 정부와 일치하는 방역 정책에 상대적으로 더 동의하였으며, 공리주의 성향의 주 효과나 상호작용 효과는 관찰되지 않았다. 반면, 공리적 정책에 대한 동의에서는 정치 성향에 따라 공리주의 성향의 효과가 달라졌다. 진보적인 참가자들은 자신의 공리주의 성향과 무관하게 전반적으로 공리적 정책을 선호한 반면, 보수적인 참가자들은 상대적으로 비공리적인 정책을 선호하면서, 자신의 공리적 성향이 강할수록 공리적 정책에 대한 선호가 증가했다. 정치 성향에 따른 정책 선호의 차이는 뉴미디어 이용 빈도에 따라서 달라졌다. 정치 성향이 정부 일치 정책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은 뉴미디어를 빈번히 이용하는 참가자들 사이에서 더 강하게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개인의 정치 성향과 도덕적 성향이 정부 정책 선호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선택적 노출을 주요 특징으로 하는 뉴미디어의 이용이 개인 성향의 효과를 심화함을 보여준다.

주요어 : 정책 선호, 코로나19, 정치 성향, 공리주의 성향, 뉴미디어

* 본 연구는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0S1A3A2A02097375).

†교신저자: 설선희, 부산대학교 심리학과,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산대학교63번길 2, E-mail: ssul@pusan.ac.kr

 © 2023, Korean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ical Association.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유행은 공중 보건과 같은 공익의 달성을 위해 정부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동의와 협조를 이끌어내는 것의 중요성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정부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태도는 정책이 지니는 효과에만 의존하지 않는다. 교육, 행정, 보건 등 다양한 영역에서 정책에 대한 태도는 개인이 지닌 정치 성향의 영향을 크게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Bruine de Bruin, Saw, & Goldman, 2020). 또한, 대부분의 공공 정책은 공익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최대 다수의 최대 이익이라는 공리주의적 가치를 다른 가치들보다 더 우위에 뒀도 되는지와 같은 도덕적 딜레마와도 직결되는데(Savulescu, Persson, & Wilkinson, 2020), 이는 개인의 도덕적 입장에 대한 태도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임을 시사한다(이민우, 설선헌, 김학진, 2014; Bostyn & Roets, 2017; Rom, Weiss, & Conway, 2017). 한편, 최근 통신 기술의 발달과 함께 등장한 뉴미디어는 높은 상호작용성을 바탕으로 개인의 판단과 행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Cook et al., 1983; Spohr, 2017), 정치 성향에 따른 양극화와 극단화를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제안된다(Baum & Groeling, 2008).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정치 성향과 도덕적 입장이 정부 정책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뉴미디어의 이용이 이러한 영향을 어떻게 조절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실생활 맥락에서 정책에 대한 태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코로나19 방역 정책에 대한 개인의 동의 정도를 조사하였다. 오미크론 변종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인해 코로나19의 유행이 심화되는 동시에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되던 2022년 초반, 기존의 정부 정책을 유지할 것인지 새로운 정책을 시행할 것인지에 대한 논쟁이 한창 활발하였던 시기적 이점을 활용하여 실제 기존 정책과 대안 정책에 대한 개인의 태도를 조사하고, 정치 성향과 도덕적 입장, 뉴미디어 이용 양상이 정부 정책에 대한 태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탐색하고자 하였다.

정치 성향과 정책에 대한 태도

선행 연구들은 정치 성향을 공중 보건(Van Holm, Monaghan, Shahar, Messina, & Surprenant, 2020)이나 환경 문제(Fielding, Head, Laffan, Western, & Hoegh-Guldberg, 2012)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와 관련된 정책에 대한 개인의 태도를 결정하는 요인으로 제안한다. 정치 성향은 투표나 선거 같은 정치적 의사결정뿐만 아니라 개인이 세상으로부터 정보를 수집하고 평가하는 과정(Castelli & Carraro, 2011)과 사고방식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는데(Jost, 2017; LaMarre, Landrevile, & Beam, 2009; Lau & Redawsk, 2006), 이는 정책을 주도하는 정당에 대한 지지 여부뿐만 아니라 정책의 내용이 개인의 정보처리 방식과 부합하는지 여부 또한 정책에 대한 태도를 결정하는 과정에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사람들이 자신의 정치 성향과 일치하는 정당의 정책을 더 선호한다는 사실은 선행 연구들을 통해 일관되게 보고되어왔다. 사람들은 자신의 정치 성향과 일치하는 정당이 제안하는 정책을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Bartels, 2002), 더 강하게 지지하는 경향이 있다(Colombo & Kriesi, 2017). Achen과 Bartels(2017)는 사람들이 정책을 판단할 때 자신의 가치나 신념을 따르기보다는 정치 성향과 일치하는 정당에 대한 당파심(partisanship)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고 제안하였다. 실제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하던 2020년 초반 미국에서는 공화당 정부가 마스크 착용이나 사회적 거리두기와 같은 방역 정책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는데 보수 성향의 사람들이 이러한 정부의 방향에 더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Kerr, Panagopoulos, & van der Linden, 2021). 본 연구가 수행되었던 2022년 2월 한국에서는 민주당 정부가 방역 정책을 주도하였기 때문에 정치 성향이 지지 정당에 대한 충성심을 통해 정책 선호에 영향을 준다면, 한국에서는 진보 성향의 사람들이 정부의 정책에 더 동의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한편, 정치 성향은 위험 지각과 같은 정보처리 방식과도 관련되어있는데, 대체로 보수 성향과 높은 위험지각 사이의 연관성이 보고되어왔다. 미국에서 이루어진 연구들에 따르면 국가의 위험 수준이 증가할 때, 공화당 지도자에 대한 지지가 증가하고(Willer, 2004), 위험을 더 많이 지각할수록 보수적 성향에 가까워지게 된다(Matthews, Levin, & Sidanius, 2009). 또한 보수 성향의 사람들은 진보 성향의 사람들에 비해 죽음에 대해 더 엄격하고(Jost, Glaser, Sulloway, & Kruglanski, 2013), 위협적인 자극에 대해 더 높은 수준의 생리적 반응을 보이는데(Oxley et al., 2008), 이러한 연구 결과들도 보수 성향의 사람들이 세상을 더 위험한 장소로 지각하고 위험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을 보여준다(Perry, Sibley, & Duckitt, 2013; Van Leeuwen & Park, 2009). 그러나 정치 성향에 따른 위험 지각의 정도가 사안의 종류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도 있다. 예를 들어, 기후 위기 문제의 경우는 보수 성향의 사람들에 비해 진보 성향의 사람들이 위험을 더 크게 지각한다(Dunlap, McCright, & Yarosh, 2016; Hamilton, 2011). 실제로 코로나19 상황에서 수행된 연구들은 진보 성향의 사람들이 보수 성향의 사람들에 비해서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위험을 더 높게 지각한다는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Calvillo, Ross, Garcia, Smelter, & Rutchick, 2020.; Van Holm et al., 2020). 도덕기반이론(Moral Foundation Theory, Graham et al., 2013)에 근거한 선행 연구들에 따르면 진보 성향의 사람들은 환경이나 위생과 관련된 영역에서의 오염(순결성, purity)에 민감하게 반응하며(Elad-Strenger, Proch, & Kessler, 2020), 이러한 경향성은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위반한 사람들에 대한 도덕 판단에서도 나타나서 진보 성향의 사람들 중에서 오염에 더 민감한 사람들이 더 엄격한 판단을 내린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Rosenfeld & Tomiyama, 2022). 이러한 선행 연구들을 종합해 볼 때, 정치 성향에 따라 코로나

방역 정책에 대한 태도에 차이가 있음이 분명해 보이지만, 그 방향성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예측을 할 수 있다. 일부 연구들에서 제안하는 것처럼 진보 성향의 사람들이 코로나19와 같은 보건과 관련된 영역에서 더 높은 위험지각을 나타내거나 오염에 대한 더 엄격한 기준을 지니고 있다면, 본 연구에서도 진보 성향의 사람들이 개인의 권리보다는 다수의 건강을 우선시하는 공리적 방역 정책에 동의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반대로, 보수적인 사람들의 전반적으로 높은 위험지각이 더 중요하게 작용한다면 보수적인 사람들이 공리적 방역 정책에 더 동의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공리주의 성향과 정책에 대한 태도

공공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정책 결정자는 최대한 많은 국민에게 최대의 이익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다. 윤리적 관점에서 볼 때, 이러한 노력은 공리주의(utilitarianism) 원칙에 부합하며(Greene, 2008; Kagan, 1998), 특히 공중 보건의 영역에서는 공리주의 원칙에 따라서 최대한 많은 인명을 구하는 것을 우선하는 정책 수립이 권고되기도 한다(Savulescu et al., 2020). 그러나 다수의 이익 실현이라는 가치는 개인의 기본권 보장과 같은 다른 가치와 빈번하게 충돌하기 때문에 도덕적 딜레마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다(Thornberg, 2006; Tota & Shehu, 2012). 코로나19 방역 정책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나 시민들의 태도도 이러한 딜레마의 좋은 실례가 될 수 있다. 최근까지도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유행(WHO, 2023)으로 세계 각국 정부는 다양한 형태의 방역 정책을 지속해왔으며(Check, Reutskaja, & Schwartz, 2022; IJerman et al., 2020), 한국의 경우, 2020년 3월 감염병 위기 경보가 '심각'으로 상향된 이후, 마스크 착용 및 사회적 거리두기와 같은 방역 정책을 시행하였다(고광욱, 2020). 이러한 방역 정책들은 코로나19를 비롯한 여러 전염병의 전파를 억제하는 실제적인

효과를 보임에도 불구하고(Hatchett, Metcher, & Lipstich, 2007; Jefferson et al., 2008), 정책에 대한 평가와 준수 정도에서는 상당한 개인차가 관찰된다(장경은, 백영민, 2022). 예를 들어, 집합 및 종교 활동과 같은 집단 활동을 통제하는 방역 정책의 경우, 종교적 자유(이준서, 2021)나 집회,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비판받았으며(김두식, 2021; 오철우, 2020), 방역 패스 및 QR 코드 의무화와 같은 방역 정책은 사생활과 개인 프라이버시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거부되기도 하였다(김진곤, 2021; 전상현, 2020).

공리주의적 입장에 대한 선호는 도덕 판단이 이루어지는 맥락이나 개인이 지닌 도덕적 입장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예를 들어, 트롤리 딜레마(trolley dilemma; Foot, 1967; Thomson, 1976) 유형의 딜레마에서 타인이 내리는 결정에 대해 평가하도록 하는 경우, 사람들은 대체로 공리적 선택을 하는 사람보다 비공리적 선택을 하는 사람을 더 선호한다. 사람들은 비공리적 선택을 하는 사람들을 더 따뜻하고 호감이 가는 사람이라고 평가하며(이민우 등, 2014; Sacco, Brown, Lustgraaf, & Hugenberg, 2017), 다수를 위해 소수를 희생하는 사람들을 덜 도덕적인 것으로 판단하고(Uhlmann, Zhu, & Tannenbaum, 2013), 덜 신뢰하며(Bostyn & Roets, 2017), 자신과 상호작용할 사회적 파트너로 덜 선택한다(Everett, Pizarro, & Crockett, 2016). 그러나, 타인의 유능함을 판단하는 맥락에서는 공리주의적 원칙을 따르는 사람들이 더 유능하다고 판단되며(이민우 등, 2014; Rom et al., 2017), 이러한 유능함이 금전적 문제와 같은 일부 영역에서는 신뢰할만한 사람이라는 평가로 연결되기도 한다(이민우 등, 2014; Levi & Stocker, 2000). 또한, 사람들은 대체로 사회적 상호작용 맥락에서 공리주의자를 선호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정치지도자에 대해서는 최대 다수의 이익을 고려하는 공리적인 지도자를 선호한다(Everett et al., 2016). 다양한 국가들에서 코로나19 방역 정책에 관련된 정치 지도자의 의사결정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를 알아본 최근 연

구에서도 최대 다수에게 공정하게 돌아가는 공평한 이익(impartial beneficence)이 강조되는 경우에, 사람들은 공리주의 원칙에 따르는 지도자를 더 신뢰하고 지지하였다(Everett et al., 2021). 이러한 선행 연구 결과들은, 공리주의보다는 비공리주의에 대한 전반적 선호가 존재하지만, 맥락에 따라서는 다수의 이익을 강조하는 공리적 정책이 선호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도덕적 딜레마에서 공리적 선택에 대한 선호 정도에는 큰 개인차가 관찰된다(Bostyn, Chandrashekar, & Roets, 2023; Fumagalli et al., 2010; Gold, Colman, & Pulford, 2015; Sorokowski, Marczak, Misiak, & Bialek, 2020). 다수를 위해 소수를 희생하는 트롤리 딜레마 유형의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이에 동의하는 정도를 측정하는 방식으로 공리적 선택의 개인차를 알아본 연구들에서는 부정적 성격 특질(Bartels & Pizarro, 2011; Koenigs et al., 2007), 공감(Gleichgerricht & Young, 2013), 인지 욕구(Conway & Gawronski, 2013)와 같은 여러 요인을 이와 관련된 개인차 요인으로 제안하였다. Kahane와 동료들(2018)은 공리주의적 입장을 선호하는 정도의 개인차를 보다 종합적으로 측정하기 위하여 옥스퍼드 공리주의 척도(Oxford Utilitarianism Scale: OUS)를 개발하여 개인의 공리주의 성향을 정량화하였다. OUS는 다수를 위한 소수의 희생이라는 도구적 희생(instrumental harm) 측면뿐만 아니라 다수의 공평한 이익 측면도 함께 고려하여 공리주의의 철학적 정의를 보다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딜레마 시나리오를 사용하여 공리주의 성향의 개인차를 측정했던 선행 연구들과 일관된 결과들이 확인된 바 있어, 타당하고 신뢰로운 공리주의 성향 측정 도구라고 할 수 있다(Kahane et al., 2018). 본 연구에서는 공리적 정책에 대한 태도가 개인의 공리주의적 입장에 대한 일반적인 선호와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OUS를 통해 측정된 공리주의 성향이 높은 사람들이 코로나19 방역 정책에서도 다수의 건강을 우선시하는 공리적 정책을 더 선호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뉴미디어가 정책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선행 연구들은 정책과 관련된 정보의 원천으로써 매체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신문이나 뉴스, 라디오와 같은 대중 매체는 시민들에게 정책을 전달하는 통로이자(Strömberg, 2004a), 정책 책임자 및 예산과 같이 직접 관찰하기 어려운 정보를 제공하는 수단으로 작용하며(Strömberg, 2004b), 사람들은 매체를 통해 제공된 정보에 기반해 정책에 대한 태도와 평가를 형성한다(Strömberg, 2001). 코로나19 방역 정책과 관련해서도 이러한 매체의 영향이 다수 연구된 바 있다. 예를 들어, 대중 매체를 통해 코로나19에 대한 정보에 더 많이 노출된 사람들이 코로나19로 인해 더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한 것으로 보고하며(Yao, 2020), 코로나19를 더 위험한 것으로 지각하고 방역 정책에 대해 더 높은 준수 의도를 보인 것으로 나타난다(Tsoy, Tirasawasdichai, & Kurpayanidi, 2021). 또한, 백신에 대해 부정적인 관점을 지닌 매체에 노출되는 것은 백신 접종 의도를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며(Betsch, Renkewitz, Betsch, & Ulshöfer, 2010; Nan & Madden, 2012), 음모론이나 거짓 뉴스, 잘못된 정보에 노출되는 것은 비효율적인 치료 방법을 시도하도록 만들거나 과잉 행동을 야기할 수 있다(Pennycook, McPhetres, Zhang, Lu, & Rand, 2020).

한편, 정책에 대한 개인의 태도와 관련해 미디어의 역할을 조망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전통적인 매체들과는 구분되는 뉴미디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트위터(Twitter)나 페이스북(Facebook)과 같은 사회관계망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SNS) 및 유튜브와 같이 소위 '소셜 미디어(social media)'로 분류되는 뉴미디어의 특징은 매체에 대한 높은 접근성과 상호작용성에 있다(설진아, 2009; Sajithra & Patil, 2013). 뉴미디어 이용자들은 실시간으로 정보 제작자와 상호작용하고 자신의 의견을 공유하는 등 정보의 제작과 재확산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Fischer & Reuber, 2011; Silvia, 2019). 뉴미디어가 지니는 이러한 속성은 이용자들로 하여 자신의 의견과 생각을 자유롭게 공유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긍정적 효과를 지닐 수 있지만(Charles-Smith et al., 2015), 자신이 선호하는 정보에만 선택적으로 노출되도록 만드는 문제점이 있다. 정보의 내용을 전달자가 결정하는 전통적 매체와는 달리 뉴미디어는 사람들이 자신의 기존 관점과 부합하는 정보에 더 쉽게 접근하고 자신의 관점과 반대되는 정보에는 접근하지 않게 되는 '선택적 노출(selective exposure)'(Holone, 2016; Pariser, 2011)을 통해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정보의 다양성이 감소하는 '필터 버블(filter-bubble)' 현상을 야기하며, 이용자의 기존 신념과 사고, 행동을 더욱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Bozdag & van Den Hoven, 2015; Pariser, 2011; Spohr, 2017). SNS와 유튜브 같은 소셜 미디어 중심의 뉴미디어가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대중들이 정보를 획득하고 의사소통을 하는 주된 플랫폼으로 이용되어왔으며(Pérez-Escoda, Jiménez-Narros, Perlado-Lamo-de-Espinosa, & Pedrero-Esteban, 2020), 정부와 대학 등 주요 조직들이 시민들에게 코로나 관련 주요 정보를 전파하는 주요 경로로 이용되어왔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Tsao et al., 2021), 뉴미디어를 이용하는 빈도가 높은 사람들일수록 정부의 방역 정책에 대해서 자신의 정치적, 도덕적 입장과 일치하는 태도를 보일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연구 목적

본 연구에서는 정치 성향과 공리주의 성향, 뉴미디어 이용 빈도가 정부 정책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탐색적으로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방역 정책의 변화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고 급격하게 진행되던 2022년 2월, 1,232명의 인구비례표본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실시하여 정책이 정부의 기존 입장과 일

치하는지 여부와 다수의 건강을 우선시하는 공리주의적인 입장을 따르는지 여부를 달리한 다양한 방역 정책들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고, 정치 성향과 공리주의 성향, 뉴미디어 이용 빈도와의 관련성을 분석하였다. 코로나19의 전 세계적인 유행이 지속되면서 방역 정책의 변화에 대한 요구가 증가했던 설문 당시의 상황은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생태학적으로 타당한 연구 환경을 제공하였다. 첫째, 정부와 여당 주도하에 지속되었던 방역 정책에 대한 제고가 이루어지면서 정치 성향에 따른 여론의 차이가 존재하여 정치 성향의 효과를 탐색하기에 적절한 시점이었다. 둘째, 방역 정책의 변화를 고려하는 과정에서 공리주의적 가치와 다른 가치들 간의 충돌이라는 도덕적 딜레마가 필연적으로 수반되어 공리적 정책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탐색하기에 적절한 환경을 제공하였다. 셋째, SNS나 개인화된 인터넷 매체와 같은 뉴미디어가 코로나19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는 주요 매체로 이용되어 그 영향력을 확인할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본 연구의 주요 연구 질문과 예상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치 성향과 공리주의 성향이 방역 정책에 대한 선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려고 하였다(연구 질문 1). 정책에 대한 태도가 정책을 주도하는 정당에 대한 지지 여부의 영향을 받는다는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진보적인 사람들이 설문 당시 정부(더불어민주당)의 정책과 일치하는 방역 정책(정부 일치 정책)에 더 동의할 것이라고 예상하였으며, 공리주의 성향이 강할수록 다수의 건강이라는 가치를 우선하는 공리적 방역 정책(공리적 정책)에 더 동의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정치 성향과 공리적 정책에 대한 태도, 공리주의 성향과 정부 일치 정책에 대한 태도의 관계에 대해서는 비일관된 선행 연구 결과들이 존재하므로 상관의 방향을 가정하지 않았다. 둘째, 정치 성향과 공리주의 성향의 상호작용이 방역 정책에 대한 선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연구

구 질문 2). 공리적 정책에 대한 선호가 공리주의 성향뿐만 아니라 정치 성향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다는 선행 연구 결과들을 바탕으로, 공리주의 성향이 공리적 정책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이 정치 성향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상호작용 효과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마찬가지로 정치 성향과 공리주의 성향의 관련성을 시사하는 선행 연구 결과들을 고려하여, 정치 성향이 정부 일치 정책에 대한 선호에 미치는 영향이 공리주의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상호작용 효과를 확인하였다. 정치 성향과 공리주의 성향 사이의 관계를 살펴본 선행 연구들을 종합할 때, 두 성향 사이의 일관된 방향성이 관찰되지 않기 때문에(Iyer, Koleva, Graham, Ditto, & Haidt, 2012; Kahane et al., 2018), 상호작용의 구체적 방향을 예상하지는 않고, 정치 성향과 공리주의 성향의 상호작용 효과를 탐색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뉴미디어 이용 빈도가 개인의 성향과 정책에 대한 태도 간의 관계를 어떻게 조절하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연구 질문 3). 뉴미디어가 지니는 선택적 노출과 필터 버블 효과를 고려할 때, 뉴미디어 이용 빈도가 높은 사람들이 연구 질문 1과 연구 질문 2에서 확인된 정치적, 도덕적 입장에 부합하는 태도를 더 강하게 나타낼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방 법

연구 참가자 및 연구 절차

본 연구에서 분석한 자료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관찰되는 다양한 편향을 탐색하기 위해 수집된 중단 연구 자료의 일부로, 조사업체 인바이트를 통해 성별, 연령, 거주지역을 고려한 인구비례표본 1,232명(남자: 660명, 평균 연령: 46.644($SD = 13.316$)세)을 대상으로 2022년 2월 17일부터 23일까지 온라인 설문을 통해 수집되

었다. 참가자들은 온라인으로 제시된 설문 참가 동의서에 자발적으로 동의한 후 설문을 진행하였으며, 사용한 설문 문항 및 설문 진행 과정은 울산과학기술원 윤리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진행되었다(IRB 면제확인번호: UNISTIRB-21-72-C). 참가자들은 무작위 순서로 제시되는 코로나19 방역 정책에 대한 설명을 읽고, 해당 정책에 얼마나 동의하는지 응답하였다. 이후, 개인의 정치 성향과 공리주의 성향 및 다른 개인차 변인들을 측정하는 질문에 응답하였고 마지막으로 인구통계학적 정보를 제공하였다. 여기서는 질문에 포함된 측정치를 중에서 본 연구의 연구 질문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분석에 사용된 주요 변인의 측정 도구 및 관련 결과에 대해서만 기술하였다.

측정 도구

코로나 방역 정책 딜레마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 방역 정책의 변화 필요성에 대한 실제 논란을 설문에 반영하기 위하여 정책을 딜레마 형식으로 제시하였으며, 기존 정부 정책과의 일치 여부와 공리주의 원칙과의 일치 여부라는 두 가지 측면을 방역 정책의 속성으로 고려하였다. 각 딜레마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정책이 지니는 도덕적 입장(공리적 대 비공리적)과 설문 수행 시기에 정부가 시행한 방역 수칙과의 일치 여부(일치 대 불일치)에 따라 4가지 유형으로 구분되었다(부록 I). 구체적으로, 공리적 정책은 개인의 다른 기본권이 침해되더라도 다수의 건강과 안전을 방역 정책의 주요 목적으로 해야 함을 강조하는 반면, 비공리적 정책은 코로나 방역이 중요하더라도 개인의 자유와 같은 다른 가치를 제한할 수 없음을 강조하도록 구성하였다. 정부 정책과 일치하는 정책은 설문을 수행한 시기에 정부가 사용한 기존의 정책을 유지하는 방향을 제시한 반면, 정부 정책과 불일치하는 딜레마에서는 기존의

정책보다 강화되거나 약화된 대안 정책을 제시하였다. 딜레마 유형마다 2개 씩, 총 8개 문항이 포함되었으며, 참가자는 0점(전혀 동의하지 않음)부터 100점(전적으로 동의함)까지의 슬라이드 바를 이용해 제시된 정책에 얼마나 동의하는지 응답하였다.

정치 성향

참가자의 정치 성향은 참가자 스스로가 생각하는 자신의 정치 성향을 ‘귀하께서는 자신의 정치 성향이 어디에 위치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7점 척도(1: 매우 진보, 7: 매우 보수) 상에서 보고하도록 하여 측정하였다. 모든 통계 분석에서 참가자의 정치 성향은 연속 변인으로 사용되었으며, 연구 결과의 시각화를 위해서 필요에 따라 중도(4점)를 기준으로 진보(1,2,3 점)와 보수(5,6,7점)집단을 구분하기도 하였다. 이 경우, 정치 성향을 구분한 기준을 그림에 별도로 명시하였다.

공리주의 성향

참가자들의 공리주의 성향은 OUS(Kahane et al., 2018)를 사용해 측정하였다(부록 II). 영문으로 작성된 OUS의 번안은 원본을 관련 분야 전문가인 한국인 교수 2인이 한국어로 번역한 뒤, 한국어와 영어에 모두 익숙한 이중언어사용자가 영어로 역번역한 것을 다시 확인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졌다. 번안된 척도는 다국가 간 비교 연구(Everett et al., 2021)에서 사용되어 영문판뿐만 아니라 다른 언어들로 번안된 척도들과도 일관된 결과를 보여준 바 있다. 설문은 9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서로 다른 상황에서 다수의 이익을 위해 소수가 희생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얼마나 옳은지를 판단하는 도구적 희생 하위 척도(사용 문항 예시: ‘무고한 사람 한 명에게 해를 가하는 것이 다른 무고한 사람 여럿을 살리기 위해 필요한 수단이라면, 무고한 사람을

해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옳은 일이다) 4문항과 최대 다수에게 공정한 이익이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얼마나 옳은지를 판단하는 공평한 이익 하위 척도(사용 문항 예시: '도덕적 관점에서 볼 때, 사람들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의 안녕(행복)을 동등하게 중요시해야 한다. 즉, 사람들은 자신과 물리적으로나 정서적으로 특별히 가까운 사람들의 안녕(행복)을 더 중요하게 여겨서는 안된다.') 5문항이 포함되어있다. 참가자들은 7점 척도(1: 전혀 동의하지 않음, 7: 매우 동의함)를 이용해 제시된 각 문항에 대해 얼마나 동의하는지 응답하였고, 9개 문항의 평균 점수가 개인의 공리주의 성향 측정치로 사용되었다. 점수가 높을수록 참가자가 높은 수준의 공리주의 성향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관찰된 OUS의 내적 일치도(Cronbach's α)는 .846이었고, 하위 척도에 따라 공평한 이익 하위 척도와 도구적 희생 하위 척도를 구분해 계산한 내적 일치도는 각각 .855, .818 이었다.

뉴미디어 이용 빈도

김하늬와 정낙원(2016)이 사용한 문항을 이용해 참가자들이 뉴미디어를 이용하는 빈도를 측정하였다(사용 문항: '귀하는 뉴스 혹은 정치사회적 정보를 얻기 위하여 다음의 미디어를 1주일에 며칠 정도 이용하십니까). 설문에는 8개의 미디어가 제시되었으며 참가자들은 8점 척도(1: 전혀 이용하지 않는다, 2: 1주일에 1일 이용 - 7: 1주일에 6일 이용, 8: 매일 이용한다)를 이용해 뉴스 및 정치적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 제시된 미디어를 1주일에 며칠이나 이용하는지 응답하였다. 이후 분석에서는 SNS와 유튜브로 구성된 뉴미디어('진보 성향 유튜브', '보수 성향 유튜브', 'SNS')를 구분하고, 평균 점수를 계산하여 사용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뉴스 및 정치적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 뉴미디어를 더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미디어가 정책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효과에서 뉴미디어만

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신문과 TV로 구성된 전통적 미디어에 대해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점수를 계산하고('지상파 TV', '종합편성채널', '뉴스전문채널', '조선, 중앙, 동아일보', '한겨레, 경향신문'), 분석에서 공변인으로 사용하여 그 효과를 통제하였다.

분석 방법

공리주의 성향과 정치 성향, 뉴미디어 이용이 방역 정책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효과를 탐색하기 위해, R(R Core Team, 2020)을 이용해 위계적 회귀 모형 분석을 수행하였다. 결과 해석의 용이성을 위하여 종속 변인을 두 종류로 구분하였다. 정부 정책과의 일치 여부에 따른 상대적 동의 정도를 반영하는 종속 변인으로는 정부 정책 일치 문항 4개의 평균과 정부 정책 불일치 문항 4개의 평균의 차이값을 사용하였다. 공리적 정책에 대한 상대적 동의 정도를 반영하는 종속 변인으로는 공리적 정책 4개 문항 평균과 비공리적 정책 4개 문항 평균의 차이값을 종속 변인으로 사용하였다. 정부 일치 정책에 대한 상대적 동의 정도와 공리적 정책에 대한 상대적 동의 정도라는 두 개의 종속 변인 각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첫째, 개인의 정치 성향과 공리주의 성향이 방역 정책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정치 성향과 공리주의 성향, 그리고 이 둘의 상호작용 항을 예측 변인으로 포함하여 위계적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뉴미디어 이용이 기존의 신호를 더 강화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연구 질문 1과 연구 질문 2에서 확인된 정치 성향과 공리주의 성향이 방역 정책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이 뉴미디어 이용 빈도에 따라 달라지는 양상을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정책에 대한 태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된 예측 변인과 뉴미디어 이용 빈도, 이 변인들 간의 상호작용 효과를 예측 변인으로 포함하는 회귀 분석을 수행하였다. 모든 회귀 모형에서 성별, 연

령, 직업 및 소득 수준이 공변인으로 사용되었으며, 뉴미디어의 효과를 탐색한 분석에서는 전통적 미디어 이용 빈도도 공변인으로 포함하여 그 효과를 통제하였다. 분석은 공변인과 절편만으로 구성된 단계와 예측 변인을 점차 추가한 단계의 설명력을 비교하여, 새로 투입된 예측 변인의 추가적인 효과를 검증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결 과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결과

연구 질문에 답하기 위한 위계적 회귀 모형을 분석하기에 앞서, 주요 측정치 사이의 관계를 탐색하기 위해 기술통계 및 상관 분석을 실시하였다(표 1). 주요 측정 변인 간 상관 분석 결과, 정치 성향과 미디어 이용 빈도, 공리주의 성향과 미디어 이용 빈도 사이의 유의한 상관이 관찰되었다. 보수적일수록 전통적 미디어[$r = .106$, $t(1230) = 3.738$, $p < .001$]와 뉴미디어를

더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r = .074$, $t(1230) = 2.605$, $p = .009$], 공리주의 성향이 높을수록 두 유형의 미디어를 모두 더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전통적 미디어 이용 빈도: $r = .219$, $t(1230) = 7.863$, $p < .001$; 뉴미디어 이용 빈도: $r = .345$, $t(1230) = 12.897$, $p < .001$]. 전통적 미디어 이용 빈도와 뉴미디어 이용 빈도 사이에도 유의한 정적 상관이 관찰되었으며[$r = .347$, $t(1230) = 25.969$, $p < .001$], 정치 성향과 공리주의 성향 사이에는 유의한 상관이 관찰되지 않았다[$r = -.002$, $t(1230) = -0.64$, $p = .949$]. 또한, 참가자들이 어떠한 방역 정책에 가장 동의하는지 탐색하기 위해, 코로나19 방역 정책 딜레마를 공리적 차원과 정부 정책 일치 차원에 따라 구분하고, 반복 측정 분산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공리적 차원과 정부 정책 일치 차원의 유의한 상호작용 효과가 관찰되었다[$F(1, 1231) = 40.385$, $p < .001$, $\eta^2 = .032$]. 사후 분석 결과, 참가자들은 공리적 정책에 가장 동의하는 반면[공리적-정부 일치: $M = 54.098$, $SD = 27.059$; 공리적-정부 불일치: $M = 55.043$, $SD = 25.966$; $t(1232) = 1.617$, $p = .106$],

표 1. 주요 변인의 기술 통계 및 상관표

변인	N	평균(표준편차)	상관표							
			1	2	3	4	5	6	7	8
방역 정책 관련 딜레마 동의 정도										
1. 공리적-정부 일치	1232	54.098(27.059)	1							
2. 공리적-정부 불일치		55.043(25.966)	.701***	1						
3. 비공리적-정부 일치		44.152(45.431)	-.357***	-.425***	1					
4. 비공리적-정부 불일치		49.384(25.620)	-.606***	-.411***	.615***	1				
5. 정치 성향	1232	3.949(1.107)	-.104***	-.064*	.103***	.143***	1			
6. 공리주의 성향	1232	3.540(1.015)	.247***	.233***	.068*	.012	-.002	1		
미디어 이용 빈도										
7. 전통적 미디어	1232	3.937(1.789)	.184***	.178***	-.004	-.018	.106***	.219***	1	
8. 뉴미디어		2.268(1.548)	.128***	.103***	.123***	.086**	.074**	.345***	.347***	1

* $p < .05$, ** $p < .01$, *** $p < .001$.

비공리적인 정책 중에서는 정부 정책과 불일치하는 방역 정책에 더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공리적-정부 불일치: $M = 49.384$, $SD = 25.620$; 비공리적-정부 일치: $M = 44.152$, $SD = 45.431$; $t(1232) = 8.200$, $p < .001$].

정치 성향과 공리주의 성향이 정부 일치 대 불일치 정책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정치 성향과 공리주의 성향이 정부와 일치하는 방역 정책에 대한 상대적 동의 정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 분석을

수행하였다(표 2). 기본 모형(단계 1)에서 정치 성향, 공리주의 성향, 상호작용 항을 순차적으로 투입하였을 때, 정치 성향을 투입한 단계 2에서만 모형의 설명력이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며[단계 2-단계 1: $\Delta R^2 = 0.004$, $F(1,1215) = 4.433$, $p = .035$], 추가적으로 예측 변인을 투입하더라도 유의한 설명력의 증가가 관찰되지 않았다[단계 3-단계 2: $\Delta R^2 = 0.003$, $F(1,1214) = 3.664$, $p = .056$; 단계 4-단계 3: $\Delta R^2 = 0.003$, $F(1,1213) = 3.126$, $p = .077$]. 최종 선택된 모형(단계 2)에서 관찰된 정치 성향의 효과를 확인한 결과, 진보적일수록 정부 정책과 일치하는 방역 정책에 상

표 2. 정부 일치 대 불일치 정책 동의 정도에 대한 위계적 회귀 분석 결과표

	단계 1			단계 2			단계 3			단계 4		
	B	β	SE	B	β	SE	B	β	SE	B	β	SE
절편	-8.958**	0.000	3.059	-5.168	0.000	3.547	-8.537*	0.000	3.957	2.354	0.000	7.320
연령	0.085*	0.063	0.043	0.087*	0.065	0.043	0.080	0.060	0.043	0.082	0.061	0.043
성별(여성)	-0.110	-0.003	1.144	-0.170	-0.005	1.143	-0.022	-0.001	1.144	-0.201	-0.006	1.148
직업												
전문직 종사자	2.325	0.041	2.210	2.140	0.038	2.209	2.321	0.041	2.208	2.321	0.041	2.207
사무 종사자	3.105	0.083	1.870	2.986	0.080	1.869	3.131	0.083	1.868	3.196	0.085	1.867
서비스 종사자	2.197	0.032	2.514	2.284	0.033	2.511	2.462	0.036	2.510	2.431	0.035	2.508
판매 종사자	-2.708	-0.278	3.165	-2.506	-0.026	3.162	-2.320	-0.024	3.160	-2.075	-0.021	3.160
농, 어업 종사자	3.887	0.013	8.210	4.266	0.015	8.200	4.466	0.016	8.192	4.700	0.017	8.186
기능원 및 관련 종사자	-0.899	-0.008	3.475	-0.925	-0.008	3.470	-0.645	-0.006	3.470	-0.831	-0.008	3.468
장치, 기계 조작 조립 종사자	2.860	0.018	4.918	2.346	0.014	4.918	2.767	0.017	4.917	2.940	0.018	4.914
단순 노무 종사자	3.520	0.033	3.451	3.492	0.032	3.446	3.541	0.033	3.443	3.822	0.035	3.443
군인	34.845	0.055	18.002	35.806*	0.057	17.982	37.458*	0.060	17.983	38.604*	0.061	17.979
학생	-0.012	0.000	3.438	0.187	0.002	3.434	0.483	0.005	3.434	0.603	0.006	3.432
전업주부	2.286	0.041	2.396	2.378	0.043	2.393	2.490	0.045	2.391	2.634	0.047	2.391
무직	0.794	0.013	2.350	0.800	0.013	2.347	0.953	0.016	2.346	1.059	0.018	2.345
소득수준	0.005	0.001	0.206	0.012	0.002	0.206	0.012	0.002	0.206	-0.001	0.000	0.206
정치 성향 (A)				-0.976*	-0.060	0.464	-0.970*	-0.060	0.464	-3.639*	-0.225	1.579
공리주의 성향 (B)							0.972	0.055	0.508	-2.021	-0.114	1.768
A × B										0.735	0.241	0.416
$R^2(\Delta R^2)$		0.013			0.016 (0.004*)			0.019 (0.003)			0.022 (0.003)	

주. 진하게 표시된 회귀계수는 .05 수준 이상에서 유의한 회귀 계수를 의미함.

B = 비표준화 회귀계수, β = 표준화된 회귀계수, SE = 표준오차. * $p < .05$, ** $p < .01$, *** $p < .001$.

대적으로 더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 = -0.060, p = .036$). 이러한 결과는 진보 성향의 사람들이 정부와 일치하는 방역 정책에 더 동의할 것이라는 예측과 일치한다.

정치 성향과 공리주의 성향이 공리적 대 비공리적 정책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정치 성향과 공리주의 성향이 공리적 정책에 대한 상대적 동의 정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위와 같은 위계적 회귀 분석을 수행하였다(표 3). 분석 결과, 예측 변인을 점진적으로 투입해 감에 따라 모형의 설명력이 유의하게 증가하여[단계 2-단계 1: $\Delta R^2 = 0.018, R(1,1215) = 24.306, p < .001$; 단계 3-단계 2: $\Delta R^2 = 0.012, R(1,1214) = 15.974, p < .001$], 최종적으로 정치 성향과 공리주의 성향의 상호작용 항을 투입한 모형의 설명력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단계 4-단계 3: $\Delta R^2 = 0.005, R(1,1213) = 6.265, p = .012$].

정치 성향에 따라서 공리적 정책에 대한 태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보기 위해, 최종 선택된 모형에서 정치 성향의 효과를 확인한 결과, 유의한 주효과가 관찰되었다($\beta = -0.360, p < .001$). 이는 공리주의 성향의 효과를 통제하더라도 정치 성향이 공리적 정책에 대한 상대적 동의 정도에 영향을 미치며, 진보적일수록 상대적으로 공리적 방역 정책을, 보수적일수록 상대적으로 비공리적인 방역 정책을 더 선호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반면, 최종 선택된 모형에서 공리주의 성향의 주 효과($\beta = -0.120, p = .212$)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공리주의 성향이 강할수록 공리적 정책을 선호할 것이라는 예측과는 다른 결과가 관찰되었다.

공리적 정책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정치 성향과 공리주의 성향의 상호작용 효과를 분석한 결과, 위에서 공리주의 성향의 주 효과가 유의하지 않게 나타난 이유는 정치 성향에 따라 공리주의 성향이 정책에 대한 동의 정도에 미치는

효과가 달랐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정치 성향 \times 공리주의 성향: $\beta = 0.320, p = .012$]. 단순 기울기 분석을 통해 상호작용 효과를 구체적으로 분석한 결과, 보수 성향의 사람들은 공리주의 성향에 따라 공리적 정책에 상대적으로 동의하는 정도가 조절되는 반면[보수(+1 SD): $B = 6.825, SE = 1.457, t = 4.683, p < .001$], 진보 성향의 사람들은 공리주의 성향이 공리적 정책에 대한 동의 정도에 영향을 덜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진보(-1 SD): $B = 1.675, SE = 1.613, t = 1.039, p = .299$](그림 1A). 진보적이면서 공리주의적 성향이 강한 참가자들이 공리적 정책에 동의하는 정도가 가장 강하게 나타났으며, 보수적이면서 공리주의 성향이 약한 참가자들은 비공리적 정책에 상대적으로 더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1B).

정치 성향이 정부 일치 대 불일치 정책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뉴미디어의 효과

다음으로 뉴미디어 이용 빈도에 따라 개인의 기존 성향이 정부 일치 대 불일치 정책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효과가 달라지는지 확인하기 위한 회귀 분석을 수행하였다(표 4). 정부 일치 정책에 대한 동의 정도를 예측함에 있어 정치 성향의 유의한 효과만 관찰된 점을 고려하여, 분석에는 정치 성향과 뉴미디어 이용 빈도, 두 변인의 상호작용 항이 예측 변인으로 사용되었다. 공리주의 성향은 성별, 연령, 직업, 소득 수준, 전통적 미디어 이용 빈도와 함께 공변인으로 고려하여 그 효과를 통제하였다.

분석 결과, 정치 성향과 뉴미디어 이용 빈도 사이의 유의한 상호작용 효과가 관찰되었다($\beta = -0.258, p = .024$). 단순 기울기 분석을 통해 상호작용 효과를 확인한 결과, 진보 성향의 사람들은 뉴미디어를 빈번히 이용할수록 정부와 일치하는 방역 정책에 상대적으로 더 동의하는 반면[진보(-1 SD): $B = 1.281, SE = 0.511, t = 2.506, p = .012$], 보수 성향의 사람들에게서는

표 3. 공리적 대 비공리적 정책 동의 정도에 대한 위계적 회귀 분석 결과표

	단계 1			단계 2			단계 3			단계 4		
	B	β	SE	B	β	SE	B	β	SE	B	β	SE
절편	-19.487**	0.000	6.939	0.367	0.000	7.984	-15.372	0.000	8.863	19.115	0.000	16.372
연령	0.628***	0.201	0.098	0.638***	0.204	0.097	0.607***	0.194	0.096	0.611***	0.195	0.096
성별(여성)	3.256	0.039	2.596	2.940	0.035	2.573	3.632	0.044	2.563	3.065	0.037	2.567
직업												
전문직 종사자	-7.991	-0.061	5.014	-8.957	-0.068	4.972	-8.111	-0.062	4.946	-8.111	-0.062	4.935
사무 종사자	-3.184	-0.037	4.243	-3.806	-0.044	4.206	-3.130	-0.036	4.184	-2.924	-0.034	4.175
서비스 종사자	-9.985	-0.063	5.703	-9.530	-0.060	5.651	-8.700	-0.055	5.621	-8.796	-0.055	5.609
판매 종사자	-4.339	-0.019	7.180	-3.278	-0.014	7.117	-2.413	-0.011	7.077	-1.635	-0.007	7.068
농, 어업 종사자	11.431	0.017	18.625	13.524	0.020	18.456	14.350	0.022	18.346	15.091	0.023	18.308
기능원 및 관련 종사자	6.684	0.026	7.884	6.545	0.026	7.811	7.855	0.031	7.770	7.266	0.029	7.757
장차, 기계 조작 조립 종사자	16.216	0.043	11.158	13.524	0.036	11.068	15.488	0.041	11.012	16.038	0.042	10.990
단순 노무 종사자	-11.929	-0.048	7.830	-12.076	-0.048	7.757	-11.847	-0.047	7.710	-10.957	-0.044	7.702
군인	39.904	0.027	40.840	44.939	0.031	40.474	52.654	0.036	40.274	56.281	0.039	40.213
학생	-13.550	-0.058	7.800	-12.509	-0.053	7.730	-11.126	-0.047	7.691	-10.745	-0.046	7.676
진입주부	-4.921	-0.038	5.436	-4.441	-0.034	5.387	-3.916	-0.030	5.355	-3.461	-0.027	5.347
무직	-2.982	-0.023	5.332	-2.956	-0.021	5.283	-2.239	-0.016	5.254	-1.905	-0.014	5.244
소득수준	0.106	0.007	0.468	0.138	0.009	0.464	0.141	0.088	0.461	0.099	0.006	0.460
정치 성향 (A)				-5.112**	-0.136	1.045	-5.082**	-0.135	1.039	-13.534**	-0.360	3.532
공리주의 성향 (B)							4.540**	0.111	1.138	-4.938	-0.120	3.953
A × B										2.327*	0.329	0.930
R ² (ΔR^2)		0.058			0.076 (0.018***)			0.088 (0.012***)			0.093 (0.005*)	

주. 진하게 표시된 회귀계수는 .05 수준 이상에서 유의한 회귀 계수를 의미함.

B = 비표준화 회귀계수, β = 표준화된 회귀계수, SE = 표준오차, * p < .05, ** p < .01,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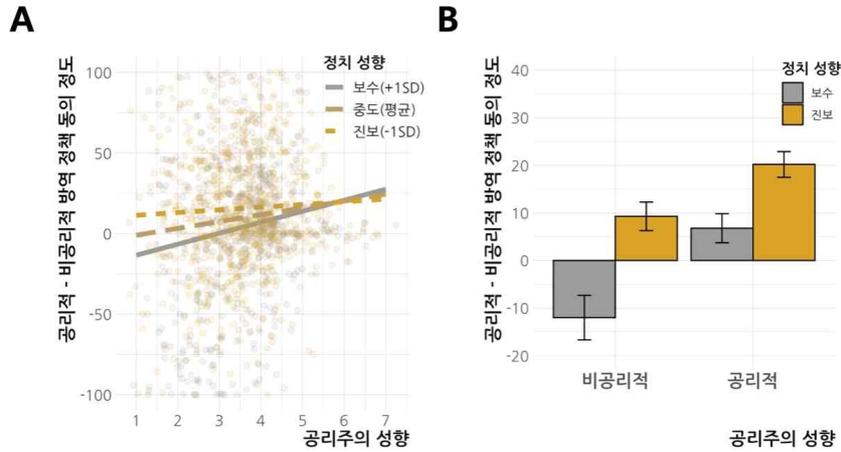


그림 1. 정치 성향과 공리주의 성향에 따른 공리적 대 비공리적 정책에 대한 태도 차이

주. (A) 공리적 방역 정책에 대한 상대적 동의의 정도에서 공리주의 성향과 정치 성향의 상호작용 효과. 실선과 점선은 각각 정치 성향의 평균을 기준으로 보수(+1 SD), 중도(평균), 진보(-1 SD) 성향의 참가자의 기울기를 나타냄. (B) (A)와 동일한 결과를 바 그래프 형태로 나타냄. 정치 성향에 따른 집단 구분은 중도(4점)를 기준으로 진보(1,2,3점)와 보수(5,6,7점)로 구분하였으며, 공리주의 성향에 따른 집단 구분은 중앙값(3.556)을 기준으로 구분함. 오차막대는 표준오차를 의미함.

표 4. 정부 일치 대 불일치 정책 동의 정도에 대한 회귀 분석 결과표

	<i>B</i>	β	<i>SE</i>	<i>t</i>
절편	-15.378**	0.000	5.018	-3.065
연령	0.081	0.060	0.045	1.802
성별(여성)	0.268	0.007	1.149	0.233
직업				
전문직 종사자	2.319	0.041	2.207	1.051
사무 종사자	3.042	0.034	1.866	1.63
서비스 종사자	2.409	0.059	2.507	0.961
판매 종사자	-2.263	0.002	3.159	-0.717
농, 어업 종사자	4.551	0.040	8.181	0.556
기능원 및 관련 종사자	-0.470	0.015	3.469	-0.135
장치, 기계 조작 조립 종사자	2.361	0.002	4.914	0.48
단순 노무 종사자	3.683	0.034	3.439	1.071
군인	36.934*	0.059	17.960	2.056
학생	0.155	0.002	3.435	0.045
전업주부	2.258	0.040	2.392	0.944
무직	0.901	0.015	2.342	0.384

표 4. 정부 일치 대 불일치 정책 동의 정도에 대한 회귀 분석 결과표 (계속)

	<i>B</i>	β	<i>SE</i>	<i>t</i>
소득수준	0.012	0.002	0.206	0.057
공리주의 성향	0.893	0.051	0.545	1.64
전통적 미디어 이용 빈도	-0.176	-0.018	0.330	-0.532
정치 성향 (A)	0.657	0.041	0.868	0.756
뉴미디어 이용 빈도 (B)	3.021*	0.261	1.184	2.552
A × B	-0.613*	-0.258	0.272	-2.256

주. 진하게 표시된 회귀계수는 .05 수준 이상에서 유의한 회귀 계수를 의미함.

B = 비표준화 회귀계수, β = 표준화된 회귀계수, SE = 표준오차. * $p < .05$, ** $p <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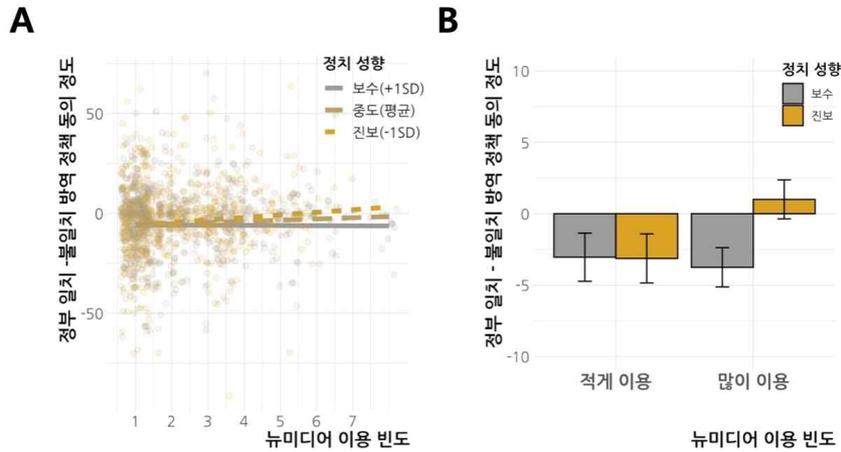


그림 2. 정치 성향과 뉴미디어 이용 빈도에 따른 정부 일치 대 불일치 정책에 대한 태도 차이

주. (A) 정부 일치 방역 정책에 대한 상대적 동의 정도에서 뉴미디어 이용 빈도와 정치 성향의 상호작용 효과. 실선과 점선은 각각 정치 성향의 평균을 기준으로 보수(+1 SD), 중도(평균), 진보(-1 SD) 성향의 참가자의 기울기를 나타냄. (B) (A)와 동일한 결과를 바 그래프 형태로 나타냄. 정치 성향에 따른 집단 구분은 중도(4점)를 기준으로 진보(1,2,3점)와 보수(5,6,7점)로 구분하였으며, 뉴미디어 이용 빈도에 따른 집단 구분은 중앙값(1.667)을 기준으로 구분함. 오차막대는 표준 오차를 의미함.

뉴미디어 이용 빈도에 따라서 정부 일치 정책에 대한 동의가 달라지지 않았다[보수(+1 SD): $B = -0.075$, $SE = 0.445$, $t = -0.169$, $p = .866$ (그림 2A, 2B). 앞서, 진보적일수록 정부 정책과 일치하는 방역 정책에 더 동의하였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이러한 결과는 뉴미디어 이용 빈도가 높을수록 개인의 성향에 부합하는 태도가 더 강하

게 나타날 것이라는 예측과 일치한다. 한편, 뉴미디어 이용의 유의한 주 효과도 관찰되어($\beta = 0.261$, $p < .001$), 뉴미디어를 빈번히 이용할수록 정부 정책과 일치하는 방역 정책에 더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 성향과 공리주의 성향이 공리적 대 비공리적

방준호 등 / 정치 성향과 공리주의 성향, 뉴미디어 이용이 코로나19 방역 정책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정책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뉴미디어의 정책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효과가 달라지는지 탐색하는 회귀 분석을 수행하였다(표 5). 공리적 정책에 대한 동의 정도를 예측함에 있어 정치 성향과 공리주의 성향의 유의한 상호작용 효과가 관찰된 것에 기반하여, 정치 성향과 공리주

표 5. 공리적 대 비공리적 정책 동의 정도에 대한 회귀 분석 결과표

	<i>B</i>	β	<i>SE</i>	<i>t</i>
절편	20.599	0.000	27.825	0.74
연령	0.526***	0.168	0.102	5.17
성별(여성)	3.260	0.039	2.568	1.27
직업				
전문직 종사자	-7.212	-0.055	4.925	-1.464
사무 종사자	-2.599	-0.030	4.170	-0.623
서비스 종사자	-8.240	-0.052	5.592	-1.473
판매 종사자	-1.404	-0.006	7.060	-0.199
농, 어업 종사자	15.421	0.024	18.261	0.844
기능원 및 관련 종사자	7.760	0.031	7.749	1.001
장치, 기계 조작 조립 종사자	15.946	0.042	10.972	1.453
단순 노무 종사자	-10.431	-0.042	7.686	-1.357
군인	59.292	0.041	40.136	1.477
학생	-10.307	-0.044	7.664	-1.345
전업주부	-3.666	-0.028	5.347	-0.686
무직	-1.284	-0.009	5.234	-0.245
소득수준	0.088	0.005	0.460	0.191
전통적 미디어 이용 빈도	1.400	0.060	0.742	1.888
정치 성향 (A)	-17.040**	-0.453	6.352	-2.683
공리주의 성향 (B)	-8.603	-0.210	7.142	-1.204
뉴미디어 이용 빈도 (C)	5.490	0.204	9.557	0.574
A × B	4.221*	0.596	1.696	2.488
B × C	-0.593	-0.110	2.206	-0.269
A × C	-0.508	-0.092	2.141	-0.237
A × B × C	-0.167	-0.153	0.478	-0.350

주. 진하게 표시된 회귀계수는 .05 수준 이상에서 유의한 회귀 계수를 의미함.

B = 비표준화 회귀계수, β = 표준화된 회귀계수, SE = 표준오차. * $p < .05$, ** $p < .01$, *** $p < .001$.

의 성향, 뉴미디어 이용 빈도 및 변인 간 이원 상호작용 항과 삼원 상호작용 항을 예측 변인으로 포함하였다.

분석 결과, 정치 성향의 주 효과($\beta = -0.453, p = .007$)와 정치 성향과 공리주의 성향 사이의 상호작용 효과가 관찰되었다($\beta = 0.596, p = .012$). 이는 앞서 관찰한 것과 동일한 결과로, 보수 성향의 사람들은 공리주의 성향에 따라 공리적 방역 정책에 대한 상대적인 동의 정도가 조절되는 반면[보수(+1 SD): $B = 9.471, SE = 1.740, t = 5.443, p < .001$], 진보 성향의 사람들은 공리주의 성향과 무관하게[진보(-1 SD): $B = 0.969, SE = 1.693, t = 0.572, p = .567$] 전반적으로 공리적 정책을 더 선호함의 의미이다. 한편, 뉴미디어 이용 빈도의 주 효과($\beta = 0.204, p = .566$) 및 뉴미디어 이용 빈도를 포함한 상호작용 항에서는 유의한 효과가 관찰되지 않았다[뉴미디어 이용 빈도×정치 성향: $\beta = -0.092, p = .813$; 뉴미디어 이용 빈도×공리주의 성향: $\beta = -0.110, p = .788$; 뉴미디어 이용 빈도×정치 성향×공리주의 성향: $\beta = -0.153, p = .726$]. 종합할 때, 공리적 대 비공리적 정책에 대한 태도에서는 뉴미디어의 이용 빈도에 따른 차이가 관찰되지 않아서, 뉴미디어 이용 빈도가 높은 사람들이 정치적, 도덕적 입장에 부합하는 태도를 더 강하게 나타낼 것이라고 예상한 연구 질문 3의 예측은 정부 일치 대 불일치 정책에 대한 태도에서만 부분적으로 관찰되었다.

논 의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유행과 같이 국가적 대응이 필요한 위기 상황에서 시민들의 협조를 효과적으로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정부 정책에 대한 개인의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요인들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오미크론 변종 바이러스의 출현으로 코로나19 유행이 심화되고 장기화되면서 정부 정책 변화의

필요성이 활발하게 논의되던 시기에, 정부 입장과의 일치 여부 및 공리주의 입장과의 일치 여부를 달리한 방역 정책들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고, 개인의 정치 성향과 공리주의 성향이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또한, 정보 수집의 주요 원천으로 자리 잡은 뉴미디어가 개인의 성향과 정책에 대한 태도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조절하는지 탐색하였다.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진보 성향의 사람들이 정부 정책과 일치하는 방역 정책에 더 동의하였다. 둘째, 진보 성향의 사람들이 비공리적 방역 정책보다는 공리적 방역 정책에 더 동의하였다. 셋째, 연령, 성별, 직업, 수입, 정치 성향의 효과를 통제하면, 개인의 공리주의 성향이 공리적 정책에 대한 상대적 동의 정도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지 않았다. 넷째, 정치 성향에 따라서 공리주의 성향이 공리적 방역 정책에 대한 동의 정도에 미치는 효과가 달라졌다. 보수 성향의 사람들은 자신의 공리주의 성향에 따라 공리적 방역 정책에 상대적으로 동의하는 정도가 달라지는 반면, 진보 성향의 사람들은 공리주의 성향과 무관하게 공리적 방역 정책에 상대적으로 더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뉴미디어를 많이 이용할수록 진보 성향의 사람들이 정부의 기존 정책과 일치하는 정책에 더 강하게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나 뉴미디어의 이용이 기존 입장을 강화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공리적 대 비공리적 방역 정책에 대한 태도에서는 뉴미디어 이용 빈도에 따른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다.

정책을 주도하는 정당의 정치 성향과 자신의 정치 성향 사이의 일치 여부는 경제, 공중 보건 등 다양한 영역에서 수행되는 정부 정책에 대한 태도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이다(Bartels, 2002; Colombo & Kriesi, 2017). 본 연구에서는 진보 성향의 정부가 코로나19 방역 정책을 주도하던 시점에, 참가자의 정치 성향과 방역 정책 관련 텔레마에 대한 동의 정도를 측정하고 비교함으로써, 정치 성향이 방역 정책에 대한 동의 정도에

미치는 효과를 직접적으로 확인하였다. 이는 공화당 정부가 코로나19 방역 정책에 대해 소극적 태도를 보인 미국에서 보수적 성향의 사람들이 엄격한 방역 정책에 반대하던 정부의 입장에 동의하였던 것으로 나타난 선행연구(Kerr et al., 2021)와 일치하는 결과로, 사람들이 자신의 정치 성향과 일치하는 정부(정당)가 주도하는 정책을 선호한다는 점을 재확인하였다. Achen과 Bartels (2017)는 정치 성향이 정책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당파심의 역할을 제안하였다. 당파심과 정당에 대한 충성심이 높을수록 합리적 사고과정보다는 지지하는 정당의 관점을 모방하고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는 현상이 더욱 두드러진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정치 성향과 정부 입장에 일치하는 정책에 대한 상대적 동의 정도의 정적 상관을 확인하여 진보 또는 보수 성향이 강할수록 정부 일치 또는 불일치 정책에 대한 지지 정도가 커지는 현상을 확인하였으나, 정치 성향의 강도가 반드시 당파심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는 한계가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당파심이 정책에 대한 태도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보다 직접적으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으며, 보수 정부가 정책을 주도하는 상황에서 보수적 성향의 사람들이 정부 정책을 더 지지하는지 확인함으로써 본 연구에서 관찰된 정치 성향의 효과를 일반화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또 다른 흥미로운 발견은 정치 성향에 따라서 공리적 방역 정책에 대한 태도가 달라졌다는 것이다. 진보 성향의 사람들이 공리적 방역 정책을 더 선호하고, 보수 성향의 사람들은 개인의 자유 및 사생활과 같은 가치를 우선하는 정책에 대해 더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진보 성향의 사람들이 희생적 딜레마 상황에서 다수를 위해 소수를 희생하는 선택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난 선행 연구 결과(Iyer et al., 2011)와 일치한다. 여러 국가들에서 마스크 착용, 백신 접종, 사회적 거리두기와 같은 방역 정책에 대해 보수 성향의 사람들이 비판적 태도를 보이고 이를 덜 준수한다는 결과

(Khubchandani & Macias, 2021; Murphy et al., 2021; Pennycook, McPhetres, Bago, & Rand, 2022)도 공리적 정책에 대한 선호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다. 정치 성향에 따른 정보 처리 과정과 도덕적 가치의 차이에 대한 선행 연구들은 정치 성향의 차이가 질병에 대한 위험 지각(Calvillo et al., 2020; Van Holm et al., 2020)이나 위생과 관련된 도덕적 기준의 차이(Elad-Strenger et al., 2020)를 통해 공리적 정책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가능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본 연구와는 무관하지만 종단 연구를 위해 수집된 다른 변인들 중 감염 위험 지각과 관련된 문항을 사용하여 추가적인 분석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정치 성향과 코로나19 감염 위험 지각(귀하께서는 자신이 코로나19에 감염될 확률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0%-100%, 11점 척도) 사이에 유의한 상관이 관찰되지 않았다($r = -.005$, $t(230) = -0.190$, $p = .849$). 이러한 결과는 정치 성향에 따라 관찰되는 공리적 정책에 대한 선호 차이가 위험 지각 이외의 다른 요인에 의해 나타난 것일 수 있음을 시사하며, 후속 연구에서는 구체적으로 정보 처리 과정 및 가치 체계에서 어떠한 차이를 통해 공리적 정책에 대한 태도 차이가 야기되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개인의 공리주의적 성향은 예상과 달리 공리적 정책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정치 성향에 따라 공리주의 성향이 태도에 미치는 효과가 달랐기 때문으로 보인다. 공리주의 성향은 보수 성향의 사람들에게서만 공리적 정책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진보 성향의 사람들은 개인의 공리주의 성향과 무관하게 공리적 정책을 비공리적 정책보다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보수적 정치 성향을 인지적 경직성과 연관지어온 선행 연구들(Zmigrod, 2020)과는 대조적이라는 점에서 흥미롭다. 한 가지 가능한 이유는 본 연구가 이루어진 시점에 시행되던 정부의 방역 정책이 대체로

공리적 기초를 띠고 있었다는 점에서 찾아볼 수 있다. 설문에 포함된 정책에서는 균형을 맞추었다 하더라도, 참가자들이 정부 정책의 방향을 전반적으로 공리적이라 인식하고 있었다면, 진보 성향의 참가자들은 정부의 기초에 대한 동의 차원에서 공리적 정책을 선호했고 그 결과, 개인의 도덕적 입장이 태도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다. 실제로 정치 성향과 공리주의 성향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일관된 결과를 찾기 어렵고(Iyer et al., 2012; Kahane, 2018), 본 연구에서도 두 변인 간에는 통계적 상관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결과는 진보 성향의 사람들이 공리적 정책을 선호하는 원인이 공리주의 자체가 아닌 다른 데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반면, 보수 성향의 참가자들은 정부를 지지하지 않기 때문에 개인의 도덕적 입장에 근거하여 정책에 대한 태도를 결정했을 수 있다. 이러한 설명이 타당한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보수 정부가 방역 정책을 주도하는 상황에서 공리적 정책에 대한 태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편, 공리주의적 성향에는 도구적 희생을 강조하는 측면과 공평한 이익을 강조하는 측면이 포함되며, OUS에도 이 두 측면을 각각 반영하는 하위 척도가 포함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전반적 공리주의 성향에 초점을 두었으나, 본 연구에서 관찰된 공리주의 성향의 효과가 구체적으로 어떤 측면에서 비롯된 결과인지 추가적으로 확인해보았다. OUS의 두 하위 척도인 도구적 희생과 공평한 이익 점수를 구분하여 둘 중 하나만 회귀모형에 포함하였을 때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았다. 공리주의 성향이 정책 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에서는 공리적 정책 및 정부 일치 정책 모두에 대해 도구적 희생 차원(공리적 정책: $\beta = 0.044, p = .155$; 정부 일치 정책: $\beta = -0.022, p = .491$) 보다는 공평한 이익 차원(공리적 정책: $\beta = 0.088, p = .005$; 정부 일치 정책: $\beta = 0.087, p = .007$)의 공리주의 성향이 더 큰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공리주의 성향

전체 점수가 공리적 정책에 대한 태도를 유의하게 예측하지 못했던 이유를 일부 설명해준다. 공리주의 성향과 정치 성향의 상호작용 효과에 대한 분석에서 도구적 희생과 공평한 이익 하위 척도 점수를 분리하여 각각 투입하는 경우, 도구적 희생 하위 척도만을 포함하였을 때는 기존 결과가 그대로 유지되었으나(정치 성향의 주효과: $\beta = -0.312, p < .001$; 정치 성향×공리주의 성향: $\beta = 0.305, p = .012$), 공평한 이익 하위 척도만을 포함하는 경우, 정치 성향의 주효과만 유의하였다($\beta = -0.132, p < .001$). 이는 본 연구에서 관찰된 주요 결과들이 도구적 희생 하위 척도에서의 개인차에서 주로 비롯된 것임을 시사한다. 그러나 뉴미디어 사용 빈도와 관련된 분석에서는 공평한 이익 하위 척도를 포함하는 경우에만 공리적 정책에 대한 태도에서 기존의 결과가 유지되었다(정치 성향×공평한 이익: $\beta = 0.457, p = .039$; 정치 성향×도구적 희생: $\beta = 0.335, p = .136$). 이러한 결과들은 도구적 희생과 공평한 이익 차원이 정책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있음 보여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분석 가능한 자료에서는 특정 하위 척도의 일관된 효과를 확인할 수 없었으며 하위 척도가 추가적인 해석을 제공하지 못했다. 후속 연구에서 공리주의 성향의 하위 척도가 공익과 관련된 판단과 의사결정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차별화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 그 기제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탐색해 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정치 성향이 정부 일치 대 불일치 정책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은 뉴미디어 이용 빈도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뉴미디어 이용이 많을수록 정치 성향이 정책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이 증가하여, 뉴미디어를 많이 이용하는 진보 성향의 사람들이 정부 일치 정책을 더욱 선호하는 양상이 관찰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뉴미디어가 선택적 노출을 증가시키고, 개인이 지니고 있는 기존 사고와 태도, 행동을 더욱 강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선행 연구들(Bozdag & van Den Hoven, 2015;

Pariser, 2011)과 일치한다. 실제로 본 연구에서 미디어 사용 빈도 측정에 포함된 미디어들을 정치 성향에 따라 구분한 뒤, 개인의 정치 성향과 일치하는 정도를 분석한 결과, 참가자들이 자신의 정치 성향과 일치하는 미디어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정치 성향-보수적 미디어: $r = .308$, $t(1230) = 11.341$, $p < .001$; 정치 성향-진보적 미디어: $r = -.106$, $t(1230) = -3.731$, $p < .001$), 미디어 선택에서부터 선택적 노출이 발생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미디어 선택에서부터 발생하는 편향이 뉴미디어의 빈번한 이용을 통해 증폭될 가능성이 있다. 선행 연구들에 따르면, 최근에는 전통적 매체로 소비되는 정보가 뉴미디어의 형태로 다시금 재소비되는 다중 소비가 빈번히 발생하는데(강미선, 2007), 이러한 현상은 기존 전통적 매체에서 어떠한 정보를 제외하는지에 따라 관찰되던 편향이 뉴미디어를 통해 더욱 강화되고 가속화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Renn, Burns, Kaperson, Kaperson, & Slovic, 1992). 본 연구의 결과는 정책에 대한 판단에서도 뉴미디어가 이용자의 정치 성향에 맞추어 기존의 태도를 강화함을 시사하며, 정치 성향에 따른 정책 선호의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제안한다. 추후 연구에서는 이용하는 뉴미디어의 정파적 속성도 함께 고려하여, 뉴미디어의 정파적 속성이 서로 다른 정치 성향을 지닌 사람들 사이의 양극화를 심화시키는데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도 보다 세밀하고 정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방역 정책과 같은 공공 정책이 성공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협조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정책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요인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정치 성향이 정부 정책에 대한 동의 정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정치 성향에 따라서 공리주의 성향이 공리적 방역 정책에 대한 동의 정도에 미치는 효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였다. 특히, 정부 정책에 대한 동의 정도에서 정치 성향의

효과는 뉴미디어에 의해 증폭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는데, 이러한 결과는 정보 획득의 원천으로 뉴미디어가 빈번히 이용되는 현대 사회에서 뉴미디어로 인한 선택적 노출과 필터 버블이 양극화 및 극단화와 같은 사회 문제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를 다시금 시사한다. 후속 연구에서는 심리적 요인과 미디어 환경이 정부 정책 선호에 영향을 미치는 구체적 기제를 체계적으로 탐색하고, 공중 보건과 관련된 영역 외에 다양한 유형의 정책들에 대해서도 본 연구의 발견이 일반화될 수 있는지 검증하여 다양한 사회 구성원들의 동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효과적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저자 소개

방준호는 부산대학교 심리학과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재학 중이다. 개인의 친사회성 및 협력과 관련된 신경기제 등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고 있다.

박지원은 울산과학기술원 바이오메디컬공학과 석박통합과정에 재학 중이다. 의사결정 및 학습 전략의 개인차, 그리고 중독의 심리신경학적 기제를 연구하고 있다.

권오상은 퍼듀 대학교 심리학과에서 수리인지과학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한 뒤 로체스터 대학교 시지각연구소에서 박사후연구원으로 재직하였다. 현재 울산과학기술원 바이오메디컬공학과 부교수이다. 시지각에서의 베이지안 추론, 인지편향, 지각적 학습을 연구하고 있다.

김효정은 미주리 주립대학교에서 언론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부산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위험, 위기, 과학, 보건 커뮤니케이션 연구를 하고 있다.

정동일은 카이스트 바이오및뇌공학과에서 학사 학위와 박사학위를 받았다. 미국 버지니아공대에서 박사후연구원을 거쳐 현재 울산과학기술원 바이오메디컬공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계산모델링(computational modeling)과 뇌 영상 및 뇌신호 분석을 통해 의사결정과 학습 과정에 관여하는 뇌의 정보처리 기작을 연구하고 있다.

설선혜는 서울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뒤 스위스 취리히대학교와 고려대학교, 미국 다트머스대학교 연구원을 거쳐 현재 부산대학교 심리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사회신경과학실험실을 운영하며 사회적 의사결정과 친사회 행동, 행복의 심리신경학적 기제를 연구하고 있다.

참고문헌

강미선 (2007). 매체조합(Media Set)으로 본 다중 매체소비 행동 연구. *광고연구*, (77), 9-35.

고광욱 (2020).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신체 활동수칙.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37(1), 109-112. doi:10.14367/kjhep.2020.37.1.109

김두식 (2021). 감염병예방방법상의 이동경로 추적과 역학조사거부죄에 대한 비판적 검토. *법학연구*, 62(1), 121-156. doi:10.35275/PNULAW.2021.62.1.004

김진곤 (2021). 예방접종과 기본권의 관계. *공법연구*, 49(3), 59-83.

김하늬, 정낙원 (2016). 정치적 태도 극화 및 적대감 증가 요인과 그 결과에 대한 탐색 연구: 커뮤니케이션 변인, 정치참여, 사회자본을 중심으로. *정치커뮤니케이션 연구*, 43, 45-82.

설진아 (2009). 소셜 미디어(Social Media)의 진화양상과 사회적 영향. *한국언론정보학회 학술대회발표논문집*, 35-57.

오철우 (2020). [코로나 19의 딜레마, 프라이버시 vs 방역의 효율] 스마트 방역 시대의 프라이버시 논란. *관훈저널*, 62(3), 118-127.

이민우, 설선혜, 김학진 (2014). 도덕적 딜레마에서의 판단경향성이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8(2), 201-226.

이준서 (2021). 코로나 19 대응의 성과와 법적 과제. *한양법학*, 32(1), 73-101. doi: 10.35227/HYLR. 2021. 2.32.1.73

장경은, 백영민 (2022). 공중보건인가, 시민권인가: 개인적·사회적 방역지침 준수인식과 코로나 19 방역정책 평가. *언론정보연구*, 59(3), 98-147. doi: 10.22174/jcr.2022.59.3.98

전상현 (2020). 감염병 시대의 방역과 기본권보장의 쟁점. *공법연구*, 49(2), 341-370.

Achen, C., & Bartels, L. (2017). *Democracy for realists: why elections do not produce responsive government*.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doi: 10.1515/9781400888740

Bartels, D. M., & Pizarro, D. A. (2011). The mismeasure of morals: antisocial personality traits predict utilitarian responses to moral dilemmas. *Cognition*, 121(1), 154-161. doi: 10.1016/j.cognition.2011.05.010

Bartels, L. M. (2002). Beyond the running tally: partisan bias in political perceptions. *Political Behavior*, 24, 117-150.

Baum, M. A., & Groeling, T. (2008). New media and the polarization of american political discourse. *Political Communication*, 25(4), 345-365. doi: 10.1080/10584600802426965

Betsch, C., Renkewitz, F., Betsch, T., & Ulshöfer, C. (2010). The influence of vaccine-critical websites on perceiving vaccination risks.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15(3), 446-455. doi: 10.1177/135910530935364

Bostyn, D. H., & Roets, A. (2017). Trust, trolleys and social dilemmas: a replication study. *Journal*

- of Experimental Psychology: General*, 146(5), e1-e7.
doi: doi.org/10.1037/xge0000295
- Bostyn, D. H., Chandrashekar, S. P., & Roets, A. (2023). Deontologists are not always trusted over utilitarians: revisiting inferences of trustworthiness from moral judgments. *Scientific Reports*, 13(1), 1665. doi: 10.1038/s41598-023-27943-3
- Bozdag, E., & Van Den Hoven, J. (2015). Breaking the filter bubble: democracy and design. *Ethics and Information Technology*, 17(4), 249-265.
doi: 10.1007/s10676-015-9380-y
- Bruine de Bruin, W., Saw, H. W., & Goldman, D. P. (2020). Political polarization in US residents' COVID-19 risk perceptions, policy preferences, and protective behaviors. *Journal of Risk and Uncertainty*, 61(2), 177-194.
doi: 10.1007/s11166-020-09336-3
- Calvillo, D. P., Ross, B. J., Garcia, R. J., Smelter, T. J., & Rutchick, A. M. (2020). Political ideology predicts perceptions of the threat of COVID-19 (and susceptibility to fake news about it). *Social Psychological and Personality Science*, 11(8), 1119-1128.
doi: 10.1177/194855062094053
- Castelli, L., & Carraro, L. (2011). Ideology is related to basic cognitive processes involved in attitude formation.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47(5), 1013-1016.
doi: 10.1016/j.jesp.2011.03.016
- Charles-Smith, L. E., Reynolds, T. L., Cameron, M. A., Conway, M., Lau, E. H., Olsen, J. M., Pavlin, J. A., Shigematsu, M., Streichert, L. C., Suda, K. J., & Corley, C. D. (2015). Using social media for actionable disease surveillance and outbreak management: a systematic literature review. *PLoS One*, 10(10), e0139701.
doi: 10.1371/journal.pone.0139701
- Cheek, N. N., Reutskaja, E., & Schwartz, B. (2022). Balancing the freedom-security trade-off during crises and disasters. *Perspectives on Psychological Science*, 17(4), 1024-1049.
doi: 10.1177/17456916211034499
- Colombo, C., & Kriesi, H. (2017). Party, policy-or both? partisan-biased processing of policy arguments in direct democracy. *Journal of Elections, Public Opinion and Parties*, 27(3), 235-253. doi: 10.1080/17457289.2016.1254641
- Conway, P., & Gawronski, B. (2013). Deontological and utilitarian inclinations in moral decision making: a process dissociation approach.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04(2), 216-235. doi: 10.1037/a0031021
- Cook, F. L., Tyler, T. R., Goetz, E. G., Gordon, M. T., Prosser, D., Leff, D. R., & Molotch, H. L. (1983). Media and agenda setting: effects on the public, interest group leaders, policy makers, and policy. *Public Opinion Quarterly*, 47(1), 16-35. doi: 10.1086/268764
- Dunlap, R. E., McCright, A. M., & Yarosh, J. H. (2016). The political divide on climate change: partisan polarization widens in the US. *Environment: Science and Policy for Sustainable Development*, 58(5), 4-23.
doi: 10.1080/00139157.2016.1208995
- Elad-Strenger, J., Proch, J., & Kessler, T. (2020). Is disgust a "conservative" emotion?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46(6), 896-912.
doi: 10.1177/0146167219880191
- Everett, J. A., Colombatto, C., Awad, E., Boggio, P., Bos, B., Brady, W. J., Chawla, M., Chituc, V., Chung, D., Drupp, M. A., Goel, M. A., Grosskopf, B., Hjorth, F., Ji, A., Kealoha, C., Kim, J. S., Lin, Y., Ma, Y., Marechal, M. A., Mancinelli, F., Mathys, C., Olsen, A., Pearce, G., Prosser, A. M. B., Reggev, N., Sabin, N., Senn, J., Shin, Y. S., Sinnott-Armstrong, W., Sjustad, H., Strick, M., Sul, S., Tummers, L., Turner, M., & Crockett, M. J. (2021). Moral

- dilemmas and trust in leaders during a global health crisis. *Nature Human Behaviour*, 5(8), 1074-1088. doi: 10.1038/s41562-021-01156-y
- Everett, J. A., Pizarro, D. A., & Crockett, M. J. (2016). Inference of trustworthiness from intuitive moral judgments. *Journal of Experimental Psychology: General*, 145(6), 772-787. doi: <https://doi.org/10.1037/xge0000165>
- Fielding, K. S., Head, B. W., Laffan, W., Western, M., & Hoegh-Guldberg, O. (2012). Australian politicians' beliefs about climate change: political partisanship and political ideology. *Environmental Politics*, 21(5), 712-733. doi: 10.1080/09644016.2012.698887
- Fischer, E., & Reuber, A. R. (2011). Social interaction via new social media:(How) can interactions on twitter affect effectual thinking and behavior?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26(1), 1-18. doi: 10.1016/j.jbusvent.2010.09.002
- Foot, P. (1967). The problem of abortion and the doctrine of double effect. *Oxford Review*, 5, 5-15.
- Fumagalli, M., Ferrucci, R., Mamei, F., Marceglia, S., Mrakic-Sposta, S., Zago, S., Lucchiari, C., Consonni, D., Nordio, F., Pravettoni, G., Cappa, S., & Priori, A. (2010). Gender-related differences in moral judgments. *Cognitive Processing*, 11(3), 219-226. doi: 10.1007/s10339-009-0335-2
- Gleichgerricht, E., & Young, L. (2013). Low levels of empathic concern predict utilitarian moral judgment. *PLoS One*, 8(4), e60418. doi: 10.1371/journal.pone.0060418
- Gold, N., Colman, A., & Pulford, B. (2015). Cultural differences in responses to real-life and hypothetical trolley problems. *Judgment and Decision Making*, 9(1), 65-76.
- Graham, J., Haidt, J., Koleva, S., Motyl, M., Iyer, R., Wojcik, S. P., & Ditto, P. H. (2013). Moral foundations theory: The pragmatic validity of moral pluralism. In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Vol. 47, pp. 55-130). Academic Press. doi: <https://doi.org/10.1016/B978-0-12-407236-7.00002-4>
- Greene, J. D. (2008). The secret joke of Kant's soul. In W. S. Armstrong (Ed.), *Moral Psychology: The Neuroscience of Morality: Emotion, Brain Disorder, and Development* (Vol. 4, pp. 35-79). Cambridge: The MIT Press. doi: 10.7551/mitpress/7504.001.0001
- Hamilton, L. C. (2011). Education, politics and opinions about climate change evidence for interaction effects. *Climatic Change*, 104(2), 231-242. doi: 0.1007/s10584-010-9957-8
- Hatchett, R. J., Mecher, C. E., & Lipsitch, M. (2007). Public health interventions and epidemic intensity during the 1918 influenza pandemic. *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104(18), 7582-7587. doi: 10.1073/pnas.0610941104
- Holone, H. (2016). The filter bubble and its effect on online personal health information. *Croatian Medical Journal*, 57(3), 298-301. doi: 10.3325/cmj.2016.57.298
- IJzerman, H., Lewis, N. A., Przybylski, A. K., Weinstein, N., DeBruine, L., Ritchie, S. J., Vazire, S., Forscher, P. S., Morey, R. D., Ivory, J. D., & Anvari, F. (2020). Use caution when applying behavioural science to policy. *Nature Human Behaviour*, 4(11), 1092-1094. doi: 10.1038/s41562-020-00990-w
- Iyer, R., Koleva, S., Graham, J., Ditto, P., & Haidt, J. (2012). Understanding libertarian morality: the psychological dispositions of self-identified libertarians. *PLoS ONE*, 7, e42366. doi: 10.1371/journal.pone.0042366
- Jefferson, T., Foxlee, R., Del Mar, C., Dooley, L., Ferroni, E., Hewak, B., Prabhala, A., Nair, S., & Rivetti, A. (2008). Physical interventions to

- interrupt or reduce the spread of respiratory viruses: systematic review. *Bmj*, 336(7635), 77-80. doi: 10.1136/bmj.39393.510347.BE
- Jost, J. T. (2017). Ideological asymmetries and the essence of political psychology. *Political Psychology*, 38(2), 167-208. doi: 10.1111/pops.12407
- Jost, J. T., Glaser, J., Sulloway, F. J., & Kruglanski, A. W. (2013). Political conservatism as motivated social cognition. *Psychological Bulletin*, 129(3), 339-375. doi: 10.1037/0033-2909.129.3.339
- Kagan, S. (1998). *Normative ethics*. NY: Routledge. doi: 10.4324/9780429498657
- Kahane, G., Everett, J. A., Earp, B. D., Caviola, L., Faber, N. S., Crockett, M. J., & Savulescu, J. (2018). Beyond sacrificial harm: a two-dimensional model of utilitarian psychology. *Psychological Review*, 125(2), 131-164. doi: 10.1037/rev0000093
- Kerr, J., Panagopoulos, C., & van der Linden, S. (2021). Political polarization on COVID-19 pandemic response in the United State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79, 110892. doi: 10.1016/j.paid.2021.110892
- Khubchandani, J., & Macias, Y. (2021). COVID-19 vaccination hesitancy in hispanics and african-americans: a review and recommendations for practice. *Brain, Behavior, & Immunity-Health*, 15, 100277 doi: 10.1016/j.bbih.2021.100277
- Koenigs, M., Young, L., Adolphs, R., Tranel, D., Cushman, F., Hauser, M., & Damasio, A. (2007). Damage to the prefrontal cortex increases utilitarian moral judgements. *Nature*, 444(7138), 908-911. doi: 10.1038/nature05631
- LaMarre, H. L., Landreville, K. D., & Beam, M. A. (2009). The irony of satire: political ideology and the motivation to see what you want to see in the Colbert Report.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Press/Politics*, 14(2), 212-231. doi: 10.1177/1940161208330
- Lau, R. R., & Redlawsk, D. P. (2006). *How voters decide: information processing in election campaigns*. NY: Cambridge University Press. doi: 10.1017/S1537592707071861
- Levi, M., & Stoker, L. (2000). Political trust and trustworthiness. *Annual Review of Political Science*, 3(1), 475-507.
- Matthews, M., Levin, S., & Sidanius, J. (2009). A longitudinal test of the model of political conservatism as motivated social cognition. *Political Psychology*, 30(6), 921-936. doi: 10.1111/j.1467-9221.2009.00733.x
- Murphy, J., Vallières, F., Bentall, R. P., Shevlin, M., McBride, O., Hartman, T. K., McKay, R., Bennett, K., Mason, K., Gibson-Miller, J., Levita, L., Martinez, A. P., Stocks, T. V. A., Karatzias, T., & Hyland, P. (2021).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associated with COVID-19 vaccine hesitancy and resistance in ireland and the United Kingdom. *Nature Communications*, 12(1), 1-15. doi: 10.1038/s41467-020-20226-9
- Nan, X., & Madden, K. (2012). HPV vaccine information in the blogosphere: how positive and negative blogs influence vaccine-related risk perceptions, attitudes, and behavioral intentions. *Health Communication*, 27(8), 829-836. doi: 10.1080/10410236.2012.661348
- Oxley, D. R., Smith, K. B., Alford, J. R., Hibbing, M. V., Miller, J. L., Scalora, M., Matem, P. K., & Hibbing, J. R. (2008). Political attitudes vary with physiological traits. *Science*, 321(5896), 1667-1670. doi: 10.1126/science.1157627
- Pariser, E. (2011). *The filter bubble: what the Internet is hiding from you*. London: Penguin Books.
- Pennycook, G., McPhetres, J., Bago, B., & Rand, D. G. (2022). Beliefs about COVID-19 in Canada, the United Kingdom, and the United States: a

- novel test of political polarization and motivated reasoning.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48(5), 750-765.
doi: 10.1177/01461672211023652
- Pennycook, G., McPhetres, J., Zhang, Y., Lu, J. G., & Rand, D. G. (2020). Fighting COVID-19 misinformation on social media: experimental evidence for a scalable accuracy-nudge intervention. *Psychological Science*, 31(7), 770-780.
doi: 10.1177/0956797620939054
- Pérez-Escoda, A., Jiménez-Narros, C., Perlado-Lamode-Espinosa, M., & Pedrero-Esteban, L. M. (2020). Social networks' engagement during the COVID-19 pandemic in Spain: health media vs. healthcare professionals. *International Journal of Environmental Research and Public Health*, 17(14), 5261-5277. doi: 10.3390/ijerph17145261
- Perry, R., Sibley, C. G., & Duckitt, J. (2013). Dangerous and competitive worldviews: a meta-analysis of their associations with social dominance orientation and right-wing authoritarianism.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47(1), 116-127. doi: 10.1016/j.jrp.2012.10.004
- R Core Team. (2020). R: a language and environment for statistical computing. R Foundation for Statistical Computing, Vienna, Austria. URL: <https://www.R-project.org>.
- Renn, O., Burns, W. J., Kasperson, J. X., Kasperson, R. E., & Slovic, P. (1992). The social amplification of risk: theoretical foundations and empirical applications. *Journal of Social Issues*, 48(4), 137-160.
doi: 10.1111/j.1540-4560.1992.tb01949.x
- Rom, S. C., Weiss, A., & Conway, P. (2017). Judging those who judge: perceivers infer the roles of affect and cognition underpinning others' moral dilemma responses.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69, 44-58.
doi: 10.1016/j.jesp.2016.09.007
- Rosenfeld, D. L., & Tomiyama, A. J. (2022). Moral judgments of COVID-19 social distancing violations: the roles of perceived harm and impurity.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48(5), 766-781.
doi: 10.1177/01461672211025433
- Sacco, D. F., Brown, M., Lustgraaf, C. J., & Hugenberg, K. (2017). The adaptive utility of deontology: deontological moral decision-making fosters perceptions of trust and likeability. *Evolutionary Psychological Science*, 3(2), 125-132.
doi: 10.1007/s40806-016-0080-6
- Sajithra, K., & Patil, R. (2013). Social media—history and components. *Journal of Business and Management*, 7(1), 69-74.
- Savulescu, J., Persson, I., & Wilkinson, D. (2020). Utilitarianism and the pandemic. *Bioethics*, 34(6), 620-632. doi: 10.1111/bioe.12771
- Silvia, S. (2019). The importance of social media and digital marketing to attract millennials' behavior as a consumer. *Marketing*, 4(2), 7-10.
doi: 10.18775/jibrm.1849-8558.2015.42.3001
- Sorokowski, P., Marczak, M., Misiak, M., & Białek, M. (2020). Trolley dilemma in Papua. Yali horticulturalists refuse to pull the lever. *Psychonomic Bulletin & Review*, 27(2), 398-403.
doi: 10.3758/s13423-019-01700-y
- Spohr, D. (2017). Fake news and ideological polarization: filter bubbles and selective exposure on social media. *Business Information Review*, 34(3), 150-160. doi: 10.1177/0266382117722446
- Strömberg, D. (2001). Mass media and public policy. *European Economic Review*, 45(4-6), 652-663.
doi: 10.1016/S0014-2921(01)00106-4
- Strömberg, D. (2004a). Mass media competition, political competition, and public policy. *The Review of Economic Studies*, 71(1), 265-284.
doi: 10.1111/0034-6527.00284
- Strömberg, D. (2004b). Radio's impact on public

- spending.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19(1), 189-221.
doi: 10.1162/003355304772839560
- Thomson, J. J. (1976). Killing, letting die, and the trolley problem, *The Monist*, 59(2), 204-217 doi: 10.5840/monist197659224
- Thornberg, R. (2006). Hushing as a moral dilemma in the classroom. *Journal of Moral Education*, 35(1), 89-104. doi: 10.1080/03057240500495336
- Tota, I., & Shehu, H. (2012). The dilemma of business ethics. *Procedia Economics and Finance*, 3, 555-559. doi: 10.1016/S2212-5671(12)00195-5
- Tsao, S. F., Chen, H., Tisseverasinghe, T., Yang, Y., Li, L., & Butt, Z. A. (2021). What social media told us in the time of COVID-19: a scoping review. *The Lancet Digital Health*, 3(3), e175-e194. doi: 10.1016/S2589-7500(20)30315-0
- Tsoy, D., Tirasawasdichai, T., & Kurpayanidi, K. I. (2021). Role of social media in shaping public risk perception during COVID-19 pandemic: a theoretical review. *International Journal of Management Science and Business Administration*, 7(2), 35-41. doi: 10.18775/ijmsba.1849-5664-5419.2014.72.1005
- Uhlmann, E. L., Zhu, L. L., & Tannenbaum, D. (2013). When it takes a bad person to do the right thing. *Cognition*, 126(2), 326-334.
doi: 10.1016/j.cognition.2012.10.005
- Van Holm, E. J., Monaghan, J., Shahar, D. C., Messina, J. P., & Surprenant, C. (2020. 4. 11). The impact of political ideology on concern and behavior during COVID-19.
<https://ssrn.com/abstract=3573224> or <http://dx.doi.org/10.2139/ssrn.3573224>.에서 2022. 11. 03 자료 얻음. doi: 10.2139/ssrn.3573224
- Van Leeuwen, F., & Park, J. H. (2009). Perceptions of social dangers, moral foundations, and political orientation.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47(3), 169-173.
doi: 10.1016/j.paid.2009.02.017
- Willer, R. (2004). The effects of government-issued terror warnings on presidential approval ratings. *Current Research in Social Psychology*, 10(1), 1-12.
- World Health Organization (2023, 01, 31). WHO Coronavirus(COVID-19) Dashboard.
<https://covid19.who.int>에서 2023, 01, 31 자료 얻음.
- Yao, H. (2020). The more exposure to media information about COVID-19, the more distressed you will feel. *Brain, Behavior, and Immunity*, 87, 167-169.
doi: 10.1016/j.bbi.2020.05.031
- Zmigrod, L. (2020). The role of cognitive rigidity in political ideologies: Theory, evidence, and future directions. *Current Opinion in Behavioral Sciences*, 34, 34-39.
doi: 10.1016/j.cobeha.2019.10.016

1 차원고접수 : 2023. 03. 09.
수정원고접수 : 2023. 08. 03.
최종게재결정 : 2023. 08. 07.

The effect of political orientation, utilitarianism, and use of new media on attitudes toward COVID-19 policy

Junho Bang¹⁾ Jiwon Park²⁾ Oh-Sang Kwon²⁾
Hyo Jung Kim³⁾ Dongil Chung²⁾ Sunhae Sul¹⁾

¹⁾Department of Psychology, Pusan National University

²⁾Department of Biomedical Engineering, Ulsan National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UNIST)

³⁾Department of Media & Communication, Pusan National University

The global pandemic of COVID-19 clearly showed that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government policies depends not only on the effectiveness of the policies but also on the cooperation of citizens. In the present study, we investigated the influence of political orientation, utilitarian propensity, and use of new media on individuals' agreements for government policies. We recruited 1,232 participants representing the South Korean population based on their demographics (i.e., gender, age, and area of residence). Participants indicated how strongly they agreed with COVID-19 prevention policies which differ in whether they are consistent with the government policies (government-consistent vs. government-inconsistent) and whether they reflect utilitarian or non-utilitarian moral stance. First, political orientation significantly predicted the relative preference for the government-consistent to government-inconsistent policies such that more liberal individuals were more likely to agree with the prevention policies consistent with the government's position. Second, liberals agreed more to utilitarian vs. non-utilitarian policies than conservatives regardless of their utilitarian propensity, whereas conservatives' preferences for utilitarian vs. non-utilitarian policies varied as a function of their utilitarian propensity. Lastly, the effect of political orientation on the policy attitude was modulated by the frequency of new media usage. Political orientation had greater influence among the participants who use new media more frequently. Our findings demonstrate that political orientation and utilitarianism influence policy preference, and new media, which is characterized by selective exposure, can amplify the effect of political orientation.

Keywords : Policy preference, COVID-19, Political orientation, Utilitarianism, New media

부록 I: 코로나19 방역 정책 관련 딜레마 문항

참가자들이 어떠한 방역 정책에 더 동의하는지 측정하기 위해 코로나19 방역 정책과 관련된 딜레마 상황을 제작하였다. 참가자들은 주어진 상황에서 해당 방역 정책에 얼마나 동의하는지를 0점부터 100점까지를 이용해 평정하였다(0-전혀 동의하지 않는다/100-매우 동의한다).

공리적-정부 일치 딜레마

- 1.1 더 많은 사람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보더라도 사회적 거리 두기를 강화해야한다.
- 1.2 개인의 자유가 침해되더라도 다수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방역 패스(백신접종 또는 PCR 검사 음성 여부 확인)를 지금과 같이 유지해야 한다.

공리적-정부 불일치 딜레마

- 2.1 개인의 자유가 침해되더라도 더 많은 사람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지금보다 더 강력한 이동제한/입국제한 조치가 필요하다
- 2.2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되더라도 다수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상세한 이동동선 공개가 필요하다.

비공리적-정부 일치 딜레마

- 3.1 코로나 방역이 아무리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개인의 자유를 제한할 수 없기 때문에 지나치게 강력한 이동제한/입국제한 조치는 피해야한다.
- 3.2. 다수의 건강과 안전에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도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위하여 이동동선 공개는 하지 않아야 한다.

비공리적-정부 불일치 딜레마

- 4.1 코로나 방역이 아무리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개인의 자유를 제한할 수 없기 때문에 방역 패스(백신 접종 또는 PCR 검사 음성 여부 확인)를 지금보다 축소해야한다.
- 4.2 더 많은 사람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일이라고 하더라도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회적 거리 두기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

부록 II: 공리주의 성향 측정 설문(Oxford Utilitarianism Scale: OUS, Kahane et al., 2018)

참가자들은 7점 척도를 이용해 제시된 문장에 얼마나 동의하는지를 표시하였다(1-강력하게 반대함 /7-강력하게 동의함)

1. 만약 위급상황에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 자신의 다리 한쪽을 희생하는 것이라면, 그 사람은 자신의 다리를 희생해야 할 도덕적 의무가 있다.

2. 도덕적 관점에서 볼 때, 살아가는 데 두 개의 신장이 모두 필요하지 않고 하나의 신장만 있어도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으므로, 우리는 신장 기능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신장 두 개 중 하나를 췌야한다는 의무감을 느껴야 한다.

3. 도덕적 관점에서 볼 때, 사람들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의 안녕(행복)을 동등하게 중요시해야 한다. 즉, 사람들은 자신과 물리적으로나 정서적으로 특별히 가까운 사람들의 안녕(행복)을 더 중요하게 여겨서는 안된다.

4. 누군가를 돕지 않는 것은 그 사람을 적극적으로 해하는 것만큼이나 잘못된 것이다.

5. 자신에게 꼭 필요하지 않은 돈을 기부하여 더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효과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그 돈을 지니고 있는 것은 도덕적으로 옳지 않다.

6. 무고한 사람 한 명에게 해를 가하는 것이 다른 무고한 사람 여럿을 살리기 위해 필요한 수단이라면, 무고한 사람을 해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옳은 일이다.

7. 만약 모든 사람들의 안녕과 행복을 보장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 짧고 제한적인 기간 동안 정치적 억압을 사용하는 것이라면, 정치적 억압을 사용해야 한다.

8. 만약, 수백명의 사람을 죽일 수 있는 폭탄이 터지는 것을 막기 위한 정보를 얻는 데 필요하다면, 무고한 사람 하나를 고문하는 것은 허용 가능하다.

9. 만약 전반적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다면, 때로는 무고한 사람들이 부수적 피해로 죽는 일이 도덕적으로 필요하다.

주. 1-5번 문항은 공평한 이익 하위 척도, 6-9는 도구적 희생 하위 척도임.